



중앙일보



www.joongang.co.kr joins.com

서울 맑음 7/19°C 인천 맑음 6/19°C

JoongAng Ilbo

제12381호 42판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

여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마련

“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법조 경력도 낮춰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전면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열린우리당과 정의당의 사전 교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에선 송영길 의원이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충청권 의원 일부가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종필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 9인 전원에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현행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의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권의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 가운데 법조인 경력은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짧게 하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헌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의원은 28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다양성·전문성을 제

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 문화상 의원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헌법재판소법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박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현재의 수도이전 위원 결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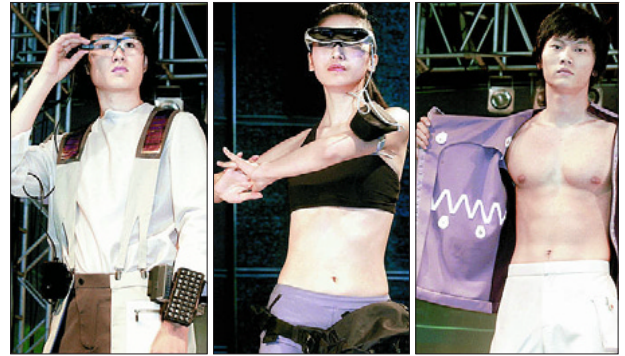
열린우리당이 현재 재판관에 대한 청문의 확대를 추진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 여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라며 “그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까지 여당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이름	나이	임명일	임기	지명자
윤영철(재판소장)	67	2000. 9.15	2005. 9.14	대통령
김영일	64	1999.12.30	2006.3.13(정년)	대법원장
권성	63	2000. 9.15	2006. 8. 4(정년)	국회(한나라당)
김홍준	61	2000. 9.15	2006. 9. 14	국회(열린우리당)
김영일	60	2000. 9.15	2006. 9. 14	대법원장
송인준	60	2000. 9.15	2006. 9. 14	대통령
추신희	56	2001. 3. 23	2007. 3. 22	대통령
전성욱	53	2003. 2. 18	2009. 8. 25	대법원장
이상길	59	2004. 2. 18	2010. 2. 17	국회(민주노동당)

※ 현재 재판관 임기는 6년(연임 가능) 단 65세에는 정년 퇴임(헌재소장은 70세)



입는 컴퓨터 시대가 온다. 컴퓨터를 입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태양전지 가 부착된 옷을 입고 공사현장에서 손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 하먼은,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MP3를 음악을 들으며 러닝머신 위를 달린다. 또 장소 없이 다니기만 해도 컴퓨터가 건강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옷도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차세대 PC산업 전시회 부대행사인 ‘입는 컴퓨터’ 패션쇼의 한 장면이다. (관계자 시 21번) 신인성 기자

지자체를 “땅값 오르면 기업 안 온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청

투자유치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땅값 잡기에 나섰다.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내내려두었다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유지하려면 기업도 사나 혁신 도시(공공기관 입주)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부 주민의 재산 불리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라남도는 27일부터 담양군 금성면 일대 150만평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시가지에서 멀어서 땅값 지정을 요청한 담양군은 사유를 극비에 부쳤다. 투자유치계획이 노출돼 땅값이 오르면 사업비가 급증하고, 결국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양군과 롯데그룹은 이밖에 10년 동안 4500억 원을 투자해 56만평의 부지에 27층의 골프장, 한옥호텔, 놀이시설 등 ‘롯데 에코랜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도는 또 지난 8월 해남군 신기·화원면 일원 1800여만평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사업인 ‘J 프로젝트’가 구체화하면서 땅값이 들쭉이 해남군이 서둘러 투기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두만강 건너 밀입북

북한서 추방된 30대

보안법 적용해 구속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북한에 밀입국했던 30대 남자가 수사 당국에 구속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7일 북한에 붙어 있던 30대 추방당국에 국내로 되돌아온 30대(남자) 씨를 국가보안법 상 입법·탈출죄를 적용,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권소 추방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며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지난해 1월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회령에 밀입국했다.

북한 측은 귀순 당일 환영 민전까지 열여주며 환대했으나 다음날 월북 동거를 물은 뒤 전씨를 외국인 수용소로 넘겼다.

이후 북한은 지난 9월까지 40여일 동안 군과 평양 출입관리소에서 전씨를 상대로 추방 행위 등을 조사한 뒤 밀입국자로 간주, 중국 정부로 인계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통보한 뒤 전씨를 추방했다.

◆ 열린우리당의 헌법 개정안을 적용하면=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폐지하고 평범상 내란죄로 대체하는 헌법 개정안을 전체 사안에 적용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회화·통신죄가 사라지게 때문이다. 전진원 기자 allonsy@joongang.co.kr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에 불만

헌 재판관들 대폭 몰갈이 포석

▶ 뉴스 분석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신형정수도 위원 결정을 점하고 두 가지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관습헌법이라는 버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결원이 과연 국민적 합의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그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를 강구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재판관은 여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바뀔 수 있다. 여권에서는 노 대통령 임명 중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연임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2008년 2월 24일까지)에 임기가 끝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국회의 선출하고, 또 다른 2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호수 기자 hodori@joongang.co.kr

“4대 법안 철회하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원 결정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관계자 시 6번)

박 대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조항 언론개혁법 등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이 헌재의 위원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덕적 책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 국회연설

균형발전 특위 제안도

박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추속조치 국회에 여러 공동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어 4대 정정 법안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정권이 그래도 보편적 복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내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안보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개조에서 나섰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서 대로 한 미 양국은 ‘한-미 신안보선언’을 채택해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 보충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호 기자 olive@joongang.co.kr

바른 먹거리

Pulmuone

“풀무원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풀무원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고객의 믿음입니다

고객의 믿을 하나로 20여년을 자라온 풀무원이기에 고객의 믿음을 재버리는 일은 바로 풀무원을 끌어내려 주는 일이란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만의 하나라도 믿음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정직한 제품 생산의 원칙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풀무원농업에는 농약 친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최근 농약 친 유기농 원료 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1년 여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재 했으나 인공 성분 단계에 있던 발효사 일부 물량이 납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응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풀무원농업에 농약 친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보도된 납품 유기농산물의 경우 풀무원 자체 조에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명백한 자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개인의 제보를 기본적이지 않은 절차나 이러한 증거도 없이 전체 유기농재가 농약 친 원료를 납품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공정하 기관을 통해 기밀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풀무원은 이번의 보도 내용에 관해 권위 있는 기관들에 의한 철저한 진실 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허위 내용과 허위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농약을 사용했다는 농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풀무원은 고객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대 여러분께 심례를 깨닫는 데서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 드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의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을 그대로 내 가족이 먹을 바른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정신을 흔들림 없이 지켜하겠습니다.

(주)풀무원농업 임직원 일동